

민주 “국정원, SNS서도 대선 댓글 여론 조작”

‘軍 댓글-국정원수사 찍어내기’ 쌍끌이 공세

한달 만에 촛불 장외 집회 ... 정부·여당 압박

민주당이 ‘軍댓글-국정원수사 찍어내기’를 내세워 정부와 여당에 총공세를 취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 공간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댓글 작업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며 국정원 개혁을 재접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기국회를 계기로 원내투쟁에 주력해 왔던 민주당은 지난 19일 다시 촛불을 들고 장외집회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국정원의 SNS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 내용 5만5689건을 분석해 공개하고 “국정원의 선거장악”이라고 집중 성토했다.

트윗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12월1일) 등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수준”(11월23일), “문재인은 종북정권”(10월28일) 등 비방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안철수와 박원순의 만남은 협찬, 특혜, 구라, 뺑, 위선을 극대화한 사건!”(9월19일)이라며 야권연대를 비난하는가 하면, “호남에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와 문재인을 민심은 알아줄 겁니다”(9월26일)라

가는 것”(박지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발과 공약 파기, 청와대·공기업의 인사 난맥, 친일찬양·독재미화·역사왜곡,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등 5대 난맥을 확인했다”며 지난 일주일의 국정감사 성과를 평가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단장, 국방위 소속 의

원들을 주축으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윤 팀장 ‘찍어내기’는 체동육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상관이 있다”며 “검찰 차원의 정권 장악 시도가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검찰 독립

목포서 ‘김대중사상’ 주제 국제 학술대회

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協, 내일 노벨상 기념관

(사)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정진백)는 전남도와 함께 22일 목포시 산전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김대중 사상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남긴 업적과 사상을 돌아켜 보고,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천하공생 세계관과 소통 철학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조호길 중국 중앙당교 교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사상의 동맥이 정치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재일 한국사 연구의 대가인 강상중 일본 세이카쿠인대학 교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혁신적 보수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남대 사학과 최영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희망 프로젝트’ 이달말 본격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밝혀

월2회 정책현장 방문 정례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지난 18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KPC)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지역위 출범 100일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청와대 출입지역기자단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거창하거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출범 후 100일 동안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설명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발표 ▲지역

발전 5개년계획 수립 ▲2013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하고 올해 11월부터 월 2회의 정책현장 방문을 정례화하는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발전위의 기능 강화를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역정책의 우선순위 정립 ▲지자체 내의 불균형 해소 ▲지역 수요·공급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지역위에 요청했다.

또 정주 여건, 생활,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의 10여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지역행복지수제도를 도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지역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정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도 뿐 아니라 시·군·구 각 지역을 방문해 지자체 내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혁신도시 아파트 전매제한 3년으로 연장

이달말 법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연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챙기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현행 계약 후 1년에서 아파트 입주 후이나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다음 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 배제

대검, 진상 파악 지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격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인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 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정식 수사할 듯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軍) 수사기관이 그동안 진행한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전망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군 검찰 혹은 조사본부(헌법)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5일 감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이버사령

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단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빈도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본부 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은 군 형법상 ‘정치관계죄’ 혹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군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아파트]				
2013타경 1413	1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16, 1동 6층 703호 [미래아파트] 63.62㎡	아파트	82,000,000 82,000,000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2389	1	장흥군 장동면 복교리 산233 29455㎡	임야	17,967,550 17,967,550
2013타경 1222	1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376 1674㎡ [국대식지분5분의1][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답	3,783,240 3,783,240
	2	동소 522-2 2018㎡ [목축1과지분동일][물건번호2: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답	7,380,480 7,380,480
		동소 522-1 1826㎡ [목축1과지분동일]	답	
	3	동소 505-1 383㎡ [목축1과지분동일]	대	1,362,540 1,362,540
2013타경 1291	1	장흥군 대덕읍 도정리 산12-1 7만7무보	임야	6,032,440 6,032,440
2013타경 1314	1	장흥군 흥산면 풍길리 산136-1 11560㎡	임야	10,404,000 10,404,000
2013타경 1352	1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530-1 1798㎡	답	14,743,600 14,743,600
2013타경 1376	1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산6 30347㎡ [강의식지분4분의1]	임야	6,828,030 6,828,030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2013타경 1376	2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산16 25745㎡	임야	19,566,200 19,566,200	
2013타경 1437	1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03~10 298㎡	대	13,410,000 13,410,000	타인소유채시외건 물매각제외
2013타경 1628	1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232-1 30㎡	대	1,650,000 1,650,000	농지취득자격증 명 외
	2	장흥군 장평면 광림리 528-11 252㎡ [도시 계획시설도로지축]	전	2,469,600 2,469,600	
2013타경 1642	1	장흥군 장흥읍 교촌리 93-1 221㎡ [일부도 시계획시설도로지축]	대	12,154,000 12,154,0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제외
		동소 93-2 274㎡	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1581	1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605-2 1449㎡ 제1 외 주차장 193.5㎡	대	949,355,640 949,355,64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도시계 획시설도로지축
		강진군 대구면 청사로 2119 지하1층183.18 ㎡ [음식점] 1층175.26㎡ 2층175.26㎡ 3층1 75.26㎡ 4층175.26㎡ 5층175.26㎡ [1~5층각 여간]	숙박시설		
[자동차, 중기]					
2013타경 1406	1	사용본거지:강진군 병영면 울천로 등쪽번호 호:610하4155 차령:카이런 년식:2008	자동차	8,500,000 8,500,000	
[기타]					
2013타경 1499	1	장흥군 장평면 녹암리 398 2122㎡	공장용지	243,751,260 243,751,26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일부도 시계획시설도로지 축
		장흥군 장평면 평동로 513 468.18㎡ 부속 건물 사무실및기숙사 142.56㎡ 제1외도 소 125㎡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과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공공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공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3. 11. 4. [월] 10:00
3. 매각결과기일 : 2013. 11. 11.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2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한 기일입찰방식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률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률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군 발행의 지기앞수 또는 현금 물,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유계약물 제출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에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의목과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자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과일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결정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대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대금, 가압류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금이나 가압류금, 발소통기를 위해서는 등본상 지대금과채를 납부한 후 등본상등소통등기 및 등본상소통등기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매각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속박하여 줍니다.
③ 소유권이전 및 지대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와 지대금 및 생활용 날로부터 2인 주민등록전입신고증 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지대금상환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입찰인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결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일 당에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와 사본 등을 무리하면 2층 사무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항목을 얻으신 후 열람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과일에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법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표에 대한 열람을 위해서는 등본상 지대금과채를 납부한 후 등본상소통등기서 및 등본상소통등기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매각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속박하여 줍니다.
⑤ 소유권이전 및 지대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과일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지역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은 매각결과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소장지정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개시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과일에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거지 재무자가 재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결과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매정보검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재판관도복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과일에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조영훈